

여야, '내년 예산안' 전면전 예고... 연말 대치 정국

민주, 오늘 감액 예산 본회의 상정
“정부가 수정안 내면 증액 협의 가능”
與 “이재명 방탄 민생 포기” 비판
우원식, 본회의 상정에 난색 표명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전면전을 예고하면서 올해도 법정기한 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내일(2일) 국회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낸 2025년 예산안은 애초부터 재정 수입은 계속 악화시키면서 권력 기관 특수활동비와 고위공무원 월급은 증액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는 축소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민생과 한참 거리가 먼 초보자 감세 예산이자, 미래 포기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는 대통령비서실, 검찰, 감사원, 경찰청 특별비 전액과 예비비 2조 4000억원을 감액했다”며 “여당에서는 이를 두고 ‘방탄 예산’이라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9월 2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박찬대(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순직해병국정조사 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는 예산 심의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2일에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부 원안에서 4조 1000억원을 삭감한

677조 4000억원 규모다.

전액 삭감된 예산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원 및 특별비 80억 9000만원, 감사원 특별비 45억원 및 특별비 15억원, 경찰 특별비 31억 6000만원 등이다.

헌법상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

의 없이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여당과의 추가 협상 여지를 열어놨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쓸데없이 특수활동비 등만 잔뜩 넣어놓으니 삭감이 통과가 된 것”이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와 협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자,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예산마저 포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자당의 주요 사업 예산 증액이 어려워 보이자 다수 의석의 힘으로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그간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각종 무리수를 두더니, 이제는 민생예산마저 불모로 삼고 있다”며 “정쟁을 위해 민생을 인질로 삼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 정치의 본령을 잊은 정당이 돼버린 민주당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 모두 2일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역화폐 사업 등의 예산 증액을 논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증액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내게 되면 (지역화폐 예산도) 협의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야당의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우원식 의장은 이날 야당 원내대표에게 만찬 회동을 제안했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참을 결정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대통령실 “野 감액안 철회없인 협상 없어” 강경

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와 관련해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정해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감액 예산안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 마약 수사 등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민생 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며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여름철 재해 재난에 즉각 대응하는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예산을 감액만 하고 증액을 하지

않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미국(트럼프) 신 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고, 날로 국제 경쟁이 격화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게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 민생의 어려움 해소에 큰 지장이 초래된다”며 “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증액 필요시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면 협상할 수 있다’고 말한데 대해, “모든 시작점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이라며 “이것의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분명히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문금주,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강화 법안 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은 1일 원활한 수입 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0월에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제도적 한계로 인해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확인된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다.

유통이력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업자 및 수입업자가 유통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개정안은 수입 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관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문 의원은 “수입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철저한 유통이력 관리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안전한 밥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한 고비’ 넘긴 이재명, 영·호남 민생 행보

TK 찾아 지역화폐 정책 강조 8-9일에는 전남과 광주 방문

사법 리스크를 한 고비 넘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월 영남과 호남을 찾아 ‘먹사니즘’ 행보를 통한 외연 확장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1일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TK)을 찾는데 이어, 오는 8일과 9일에는 전남과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의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역상업권 활성화’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서는 소단위 경제가 살 수 있도록 해야 한

다”며 “그 방법 중 하나가 지역화폐를 통해 재정 지출을 늘려주고 지역에 순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기 연천군의 면 단위 지역에서 월 15만원씩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을 5년, 연장하면 10년씩 하는 정책이 있었는데, 동네에 미용실이 생기고 인구도 늘었다”고 정책 성과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후 포항 죽도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진 뒤 2일 오전에는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연다.

이번 대구 방문과 당 최고위원회의의 개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이후라는

점에서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 대응으로 잠시 멈췄던 외연 확장 행보를 재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 경제 실정을 적극 부각해 민생을 챙기는 수권정당의 면모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호남과 충청 등 비수도권 지역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다.

오는 8일에는 나주에서 ‘쌀값 안정화를 위한 농민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필요성 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9일에는 광주에서 현장 최고 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 결국 파행... 출범 3주만

與 “공식적 회의 중단·휴지기” 의료계 “당정, 해결 의지 없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파행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 변경 문제 등을 놓고 각 주체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대한 의학회 등이 1일 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4차 회의를 마친 뒤 “의료계에서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의 변경을 지속해서 요청해 왔다. 이는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참으로 어려운 요구”라며 “여야의정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

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와 정부·여당은 지난 11월 11일부터 네 차례 걸쳐서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의료 인력 증원, 의학교육기관 평가 문제 및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과정을 거쳐왔다”며 “의평원 자율성 보장 등에 대한 공감대가 일부 형성됐고, 의료개혁특위 개편 논의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끝까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에는 유감”이라며 “추후 협의체 참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외과대학·의학전문

대학원협의회(KAMC·의대협회)는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대한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이는 정부가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하기 위한 단호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며 “의료 현실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여당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아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야당 역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의정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가 없고, 정부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